

# 희망 잃은 청년들 탈출구 만든다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열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향후 5년간 추진전략 등 청사진 마련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은 청년희망도시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청년정책의 발끝부터 기획·실행까지 책임질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미취업 20대 청년들이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심포'를 확대, 청년소통공간 '비밀'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교류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질 예정이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장실에서 열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핵심사업

등을 발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과 대학교수, 청년활동가 등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20여 명과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남춘호 교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서 반복되는 구직실패로 상처받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향후 5년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주형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해 5월부터 청년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추진전략 등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관계/협력의 희망생태계

조성, 청년이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소통·거버넌스 △고용·일자리 △복지 △사회·문화의 4개 영역 13개 핵심사업, 30개 기본사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연구진은 일자리창년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희망단으로 구성된 전주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청년 조직화 및 실행을 위한 중간조직인 '청년센터(가칭)'를 설치해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완성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 등에서 혁신적 일자리를 발굴해 현장 중심의 일 경험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연계'에 기반한 전주형 뉴딜일자리와 청년창업가와 문화예술가, 청년모임이 공존하는 '청년창업지구 조성' 등의 핵심사업도 제시했다.

참여한 정책위원들은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공감하는 한편 청년창업과 청년협력 활성화 강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과 정책위원들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 담당 부서의 실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중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도 시의회 의결과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전주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간보고회, 실무진 간담회(2회), 온·오프라인 청년공청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 하반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위한 2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 '제2의 원영이 사건' 없도록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 파악

도교육청, 초등 신입생 미확인 아동 30명 집계 학교 - 경찰 추적 조사

전북교육청이 지난 1월 5일까지 도내 422개 초등학교들에서 진행된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081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016년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아동학대 등에 의한 소재 불분명 아동이 있는지 예비소집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25일까지 모든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1월 22일자 처음 집계결과, 서류상 예비소집 불참자 1,081명(총 취학대상자 17,050명의 6.3%) 중 1,051명은 해외거주, 해외여행,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 등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실제 소재가 확인이 안되는 아동수는 3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재 불분명자 30명의 경우, 현장 점검결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학교와 주민자치센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추적을 벌인 결과, 1월 25일 15시 기준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소재 불분명자 30명 중에서 23명은 전학 예정이거나 1년간 취학유예 또는 해외로 출국한 아동 등이었고, 나머지 7명의 아동은 해당 학교에 입학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당국이 3월 새 학기 전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지난 2017년도가 처음이었다.

지난 2017년도에는 2월 10일까지도 13명의 소재가 불분명했었고 2월 20일에야 소재파악이 마무리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달가량 빨리 소재파악이 마무리되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내주는 취학 아동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만이 기록되어 있고, 보호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지역 안전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맞춘 전북대학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철로)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을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6일 오후 2시 전북대 본관 8층 회의실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전북대 이철로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 3개소, 수익사업단 9개소, BK21 플러스 사업 17개소, LINK+사업, 인프라사업단 76개소 운영하고 있다.

전북권 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함으로써 도내 대학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고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공단과 협조하여 장애인 고용 인프라 설치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6일 오후 2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 직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자회사 설립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총 11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전북대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전북대 이철로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이래로 LG,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7년 12월말 기준 총 60개가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총 2,798명(중증1,958명)에 이르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